

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모두발언 (3.30일)

- 안녕하십니까,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도규상입니다.
- 어제(3.29일) 대통령님 주재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「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」을 발표하였습니다.
 -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, “부동산 투기에 관용은 없다”는 각오 하에 오늘부터 「부동산 투기 특별 금융대응반」을 가동합니다.
- 「특별 금융대응반」은 금융권의 활용가능한 모든 인력·자원을 투입하여, 최고수준의 긴장감을 갖고 부동산 투기에 대응할 것입니다.
 - 첫째, 이미 취급된 대출 중 투기혐의가 의심되는 경우, 특별 현장검사를 지체없이 실시하고 위법사항 발견시 수사기관에 즉시 통보하겠습니다.
 - 둘째, 향후 신설될 부동산거래분석원과 공조하여, 의심거래가 급증하는 지역 및 금융회사에 대한 중점점검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.
 - 그 이전이라도, 금융정보분석원(FIU)을 통해 신도시 등 부동산 투기우려지역에서 발생하는 의심거래를 집중분석하고, 관련 정보는 수사당국과 신속히 공유하겠습니다.
 - 셋째, 토지관련 대출과정에서 위규사항이 적발될 경우, 단 하나의 예외도 없이 엄중 제재할 것입니다.
 - 아울러, 농지법 위반 등으로 농지처분의무가 부과되는 투기관련자의 대출은 신속히 회수되도록 하겠습니다.

- 넷째,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대출이 일어나지 않도록, 농지 등 非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규제를 정비하겠습니다.
 - 담보인정비율 등 대출과정 전반을 세밀하게 점검중이며, 개선 필요사항들을 「가계부채 관리방안」에 담겠습니다.
- 마지막으로,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 중심으로 불법대출 신고센터(☎1332)를 확대·개편하겠습니다.
 - 부동산투기 관련 불법·부당한 대출이 의심될 경우, 1332번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 - 금융기관이 불법대출을 자진신고 할 경우, 과태료 최대 50% 감경 등 금융권 자정노력을 지원하겠습니다.

□ “금융이 부동산 투기에 활용되는 일”은, 앞으로 더 이상 발생하지 않아야 합니다.

- 지난 수십년간 자본시장 불공정행위와 같은 중대 금융범죄와 싸워왔던 금융당국만의 Know-How가 축적되어 있습니다.
 - 이를 십분 활용하여 각종 탈법적 부동산 투기거래를 적발·제재해 나가겠습니다.
 - 아울러, 이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법 개정 등 제도개선에도 적극 나서겠습니다.
- 오늘부터 “부동산 투기 억제”는, 금융권의 가장 중요한 목표 중 하나입니다.
 - 금융위와 금감원은 물론 금융회사 임직원들도, 국민의 기대에 어긋나는 일이 없도록 경각심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.

□ 감사합니다.